



“이건희 동영상 의혹’, 사장이 직접 전화” 경영진, 보도에 직접 개입...단협 ‘편집권 독립’ 규정에 위배 “회장님 걱정한 임원, 5.18 제창논란 보도에 대노”

박노황 사장과 경영진이 중대한 사회 현안 보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노황 경영진이 취임 이래로 편집권 독립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단체협약 제13조(편집권 독립)에는 “편집권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는 편집권 독립을 제도로 보장함으로써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공정정보 정신의 훼손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입 논란이 제기된 현안이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의혹,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등 정치·경제 권력과 관련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16년 7월 뉴스타파 보도로 이 회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회사가 관련 보도에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검찰로 공이 넘어가면서 종종 단독을 발굴하는 등 차질 없이 보도가 이뤄졌다. 당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독자 관심과 여론도 두 갈래로 나뉘어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영상은 어떻게 찍혀 사용됐는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이 의혹을 일단락할 보도가 될 수 있었다. 이를 단독 취재한 사회부 법조팀은 지난 4월 2일 아침자로 기사를 올렸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동안 작성창에서 DDH(보류)를 반복하더니 결국 킬됐다. 기자들의 반발로 뒤늦게 나간 기사는 데스크 후 송고시점도, 표현도 ‘맹맹’해졌다.

공정정보위원회가 이를 편집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때 사측 편집위원들의 공식 답변은 ‘3년반짜 자리에 누운 사람의 성매매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현장 기자들이 발로 뛰어 취재한 기사를 죽인 이유였을까.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안수훈 사회부장은 당시 박노황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장이 기사 단건과 관련해 부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회사 경영을 맡은 대표이사가 편집국에서 나가는 기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당시 박 사장은 삼성의 언론사 광고 현황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총수에게 치명타가 된 사건의 보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삼성 광고 수주의 어려움을 말하며 보도에 직접 개입한 셈이다.

안 부장은 이에 대해 “사장이 당시 전화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기사에 개입하는 길은 사실 박 사장이 취임하면서 과거 ‘편집상무’로 불렸던 ‘콘텐츠융합상무’ 자리를 만들어 연합뉴스 ‘편집인’으로 만들었을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다.

막상 편집인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인 편집위원회 참석이 실질적으로 전무했던 조복래 상무는 2015년 5월 편집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콘텐츠상무가 편집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기사를 보고 개입할 의사도 없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직접 개입할 의사와 여유가 없었다는 이 말은 이후 사실로 유지됐을까. 한편 조 상무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누워계시는 이견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다.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간다”는 문자를 보냈던 일이 최근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2015년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가 주도적으로 기사화했으나 지난해에는 달랐다. 본사 정치부와 통일외교부에서 기사를 대부분 처리했다. 특히 당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합창을 둘러싼 논란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다. 광주본부에서 송고된 기사가 대폭 축소된 채로 포털고침되는가 하면, 큰 이슈가 벌어졌는데 광주 현장의 송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안건은 편집위에 올랐다. 회의록에 따르면 황대일 전국·사회에디터는 광주본부 기사들에 대해 “제목부터 내용까지 편향 시비를 부를 여지가 많았고 항의도 들어왔다”며 “공정성 문제는 회사가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쪽지로 벌리는 게 공정한 것인지는”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관한 기자들의 ‘편향된’ 보도를 ‘바로잡으라’는 지시는 그래픽뉴스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을 때 큰 화제를 모았을 만큼 그동안 제창·합창을 둘러싼 논란은 큰 이슈였고, 주요 이슈를 시각적으로 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픽뉴스에도 자연스럽게 뉴스 가치가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래픽뉴스팀은 지난해 5월 16일 관련 그래픽(그림1)을 송고했다. 제창·합창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간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렀는지 일

(그림1)



(그림2)



‘어느 쪽이 종합?’ 사진과 그림이 들어가고 내용이 더 풍부한 왼쪽 그래픽과 내용이 훨씬 적은 오른쪽 그래픽 중 어느 쪽이 나중에 송고된 종합 버전일까? 정답은 오른쪽이다.

지로 담았다. 또한 과거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래픽기사로서 시각적 효과를 내 고자 2005년 기념식 때 대통령으로 참석한 노 전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로서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이 한 자리에 있는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삼았다.

당시 광주취재본부에서 나간 글 기사를 바탕으로 그래픽기사가 작성됐다.

그러나 이 그래픽기사는 저녁에 종합(그림2)으로 다시 작성돼 송고됐다. 저녁 당직기자가 내보낸 종합 그래픽기사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빠졌고 2004·2013년 사례에 대한 설명은 통째로 사라졌다. 종합이 첫 기사보다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파악된 당시 종합 지시 과정은 이렇다. 조복래 콘텐츠융합 상무가 이 그래픽기사가 편향적이라며 ‘대노’했고, 이창섭 당시 편집국장 직무대행과 황대일 당시 지방·사회 에디터에게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상무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고 기사 단건에 대해 내가 지시를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직무대행은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으며 황 에디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은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박노황 경영진 아래에서 벌어진 임원·간부들의 편집권 침해, 공정정보 파괴, 업무상 부당행위 등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향후 재발을 막고자 백서 발간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국정통신사’ 비아냥 자초한 ‘국정교과서’ 보도

찬반격론 한창인데 ‘새 교과서 제언’ 특집·‘바른 역사교육’ 기획

국정교과서에 ‘단일교과서’ ‘명품교과서’ 정부의 엉뚱한 작명 거들기

돌이켜보면, 불공정 보도의 표본이었다.

“연합뉴스 공정정보위원회는 2015년 11월 ‘공정보도 2015-1호’를 발행해, 회사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루면서 일부 편향성 시비를 불러올 만한 기사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그해 10월 1천건 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사를 제작할 만큼 교과서 문제 보도에 천착했다. 그러나 사회에서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대한 찬반 격론이 한창일 때 이미 ‘어떤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집중된 편파적인 기획을 했고, 배포도 안 된 교과서로 편향성을 공격하는가 하면, ‘국정 교과서’라는 널리 쓰이는 표현 대신 ‘단일 교과서’ 표기 지침을 내려 용어 세탁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벌어진 불공정·불합리한 기획·데스킹·작성 지시를 요약한다.

▲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제언> 기획

- <역사교과서 제언> “국정화해도 보완장치 두면 위험 소지 없을 것”
- <역사교과서 제언> “중립적인 평가위가 ‘객관성’ 평가해야”
- <역사교과서 제언> “논쟁여지 있는 부분 두 평가 다 넣어야”
- <역사교과서 제언> “현대사는 1953년까지 다뤄야”
- <역사교과서 제언> 신형식 “대한민국 정통성 서술 강화해야”
- <역사교과서 제언> 이만열 “단일교과서로는 정치 굴레 못 벗어나”
- <역사교과서 제언> 경제사 전문가들 “이렇게 해야 한다”
- <역사교과서 제언> “전태일 넣어야 하지만 시대흐름 속에 서술해야”
- <역사교과서 제언> 권희영 “경제성장 부정적 측면만 다루”

기사 7건으로 구성된 이 특집이 송고된 2015년 10월 15일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 예고한 직후로 확정고시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었다. 한국 사회가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갈라져 찬반 격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시점인 만큼 국정화 논란 자체에 집중해야 했던 시기였는데도, 회사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고민하는 기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 기획의 편집자주를 보면 회사가 국정화를 ‘단일화’로 지칭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교과서를 만드는’ 사명감을 얼마나 강하게 보였는지 알 수 있다.

<※ 편집자주 = 정부가 학교별로 다른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명망있고 실력있는 명예교수는 물론 노장청을 아우르는 집필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교과서를 만들려면 집필진 못지않게 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표방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편향성 시비를 없애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연합뉴스는 새 교과서 출간에 필요한 각계 지혜를 모으고자 전문가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 2015년 10~11월 <바른 역사교육> 기획

- <바른 역사교육> ①이념 열개에 얽인 ‘역사전쟁’... 끝없는 진영대결
- <바른 역사교육> ②건국, 이승만, 박정희, 6·25... ‘역사대립’ 핵심쟁점
- <바른 역사교육> ③교과서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민중사관’
- <바른 역사교육> ④한국사 교과서에 비친 이승만·김일성
- <바른 역사교육> ⑤교사용 지도서·참고서 편향 논란
- <바른 역사교육> ⑥현장에서 빛어지는 편향 교육
- <바른 역사교육> ⑦교과서 개정 때마다 벌어진 ‘역사전쟁’
- <바른 역사교육> ⑧집필자 자격기준 없다시피한 역사교과서
- <바른 역사교육> ⑨거리로 나온 ‘역사권력’... 헤게모니 충돌

<바른 역사교육> ⑩검정교과서 ‘검정’에 손놓은 교육부

<바른 역사교육> ⑪역사교과서 기준 틀 잡자

<바른 역사교육> ⑫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일정 어떻게 되나

<바른 역사교육> 박지향 “일선교사 자질부족... 학계 최신연구 소화못해”

<바른 역사교육> 김우창 “교과서 보다 역사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

<바른 역사교육> 이돈희 “정치적 득실로 접근하면 국민설득 못해”

순차적으로 나간 기사 15건을 엮은 이 기획은 슬러그 자체가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인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이전 정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바른 역사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봐도 국정화 찬성론자의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소개된 반면, 반대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수준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경우까지 있었다. 작성 단계에 포함됐던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데스킹 과정에서 일부 삭제됐다.

당시 미디어오늘은 이 기획을 이유로 “‘국정통신’으로 전략하는 연합뉴스”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이 기획 기사에 인용된 한 교수가 ‘역사교육에 국정화는 맞지 않는다는 말도 했는데 인터뷰 의도가 다르게 전해진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

▲ 이미지 희석하는 ‘정명운동’

<역사교과서 제언> 기획 시리즈가 송고된 2015년 10월 15일, 편집국장 직무대행의 지시사항이라며 일선 기자들에게 ‘국정’이라는 표현 대신 ‘단일’이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자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정’은 ‘검정’, ‘인정’ 등과 같이 이미 지극히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인데도 굳이 ‘단일화’라는 용어로 바꿔쓰자는 것은 교과서 국정화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바꿔보려는 ‘정명운동’ 또는 ‘용어세탁’으로 받아들여졌다.

공보위는 그날 저녁 사측에 해당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국정화라는 단일 어휘만 반복하지 말고 문맥에 맞게 다양한 표현을 쓰라는 의미였다”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하루 만에 지시를 철회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다루면서 난데없이 ‘명품교과서’라는 난데없는 표현이 등장했다. <‘명품 교과서’ 공은 교육부로... 박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주력>이라는 기사에서 명품교과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등장하는 표현이었는데, 쌍따옴표가 아닌 작은 따옴표와 함께 제목에 오른 것이다. 당시 사용되던 교과서가 여러 기사에서 ‘좌편향’이라는 말로 쌍따옴표 속에 묶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무리 인용이라지만 ‘명품교과서’는 낯뜨거운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 교묘한 데스킹으로 ‘편향성’ 공격

교묘한 의도가 의심되는 데스킹으로 독자를 호도하는 과정도 있었다.

당시 교육부가 편향성을 대거 지적한 2013년 교과서는 검정 과정을 거친 최종 교과서가 아니라 출판사들이 검정을 위해 제출한 심사본이다. 그런데 2015년 10월 15일 ‘한국사 교과서들의 편향적 내용은’이라는 기사가 송고됐다. 데스킹 과정에서 현장 기자가 제목에 쓴 ‘수정되기 전’이라는 말이 빠졌다. 포털에 송고된 최종본 제목은 ‘출판사별 현대사 편향성 ‘대해부’...’북한에 관대’였다. 제목만 읽어서는 실제 사용되는 교과서 내용이 편향됐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연합뉴스 편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업후 노사합의 편집총국장제, 단숨에 무력화

2009년 노사 합의로 제정돼 2012년 파업으로 개정된 연합뉴스 편집규약에는 “연합뉴스의 편집권은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이 공유하되 편집인이 대표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103일의 파업으로 얻어낸 또 다른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으로는 “회사는 편집권 독립을 제도로 보장함으로써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공정보도 정신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제2조 4항이 있다.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공정보도 정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이 제도가 이듬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반영된 편집총국장 제도다.

연합뉴스 편집인은 경영진이 아니라 기자들이 임명에 동의한 편집총국장이고, 편집국 구성원 인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편집총국장과 협의해 실시하며, 기자들이 편집총국장을 중간 평가하고 신입 여부도 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편집권 독립 제도가 공정보도의 구현을 전부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회사 안팎에서 오는 부당한 입김으로부터 기자들의 공정보도 정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은 분명하다.

이 제도는 현 경영진에게는 눈엣가시였던 것이 분명하다. 박노황 사장이 2015년 3월 25일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뒤인 27일 처음 단행한 기구개편의 핵심이 편집총국장 직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편집국은 바로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 산하로 이관됐다. 조복래 콘텐츠융합 상무는 2014년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 투표가 부결돼 이루지 못했던 그 어려운 ‘편집인의 꿈’을 이렇게 이뤘다.

기구개편과 함께 듣도 보도 못한 ‘편집국장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이 인사 사령에 등장했다. 경영진은 연합뉴스 편집국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직무대행이라는 애매한 꼬리표를 붙인 채로 이창섭 부국장에 이어 류현성 부국장까지 현재까지 2명을 앉혔다.

조복래 상무를 단장으로 한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취재단 가동을 알리는 2017년 8월 10일자 사고(社告)에는 부단장을 ‘류현성 편집국장’으로 적어놓고 있다. ‘직무대행’이라는 꼬리표를 회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렵게 마련한 편집권 독립 제도를 손쉽게 뒤집어버린 처사에 대한 회사 구성원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같은 해 4월 21일 법원에 단체협약 이행과 조복래 상무·이창섭 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냈다.

경영진은 즉각 조합 집행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간부들을 통해 오정훈 당시 지부장을 향해 “개인적으로 낸 소송”이라고 근거없이 공격했다. 박 사장은 “회사가 사상 초유의 참담한 위기 상황”이라는 호소문을 내더니 단협을 지켜내려 하는 노조를 향해 “파업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맺어진 단협”을 고집하려 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새로 출범한 노조 집행부의 김성진 지부장과 마주앉은 노사협의 자리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약간의 실망을 했다. 새 집행부와 잘 의견을 수렴해서 회사의 이익이 확대되도록 인사권을 제대로 경영진이 갖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노영언론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며 편집총국장제 유지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노영(勞營)언론’이나 할 일로 몰아갔다.

급기야 103일 파업을 이끌었던 공병설 전 지부장과 권혁창·경수현 쟁의대책위원 등 파업 지도부 3명을 지방으로 발령하겠다는 위협까지 나왔다. 결국 가처분 신청 직후 갓 출범한 새 노조 집행부는 조 상무로부터 지방 발령 보류를 검토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가처분을 취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에게 ‘신의’ 같은 것은 없었다. 취하 8일 만인 5월 15일 공 전 지부장은 충북 제천으로, 이주영 전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는 대전으로 발령났다.

이에 조합은 5월 27일 법원에 단협 이행 가처분을 다시 신청했다.

회사가 이때 법정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보면 경영진이 이에 대해 얼마나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스스로 신의를 어겨놓고서 조합의 움직임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지극히 사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지극

히 정상적인’ 전보발령이란 공 전 지부장 등의 지방발령을 가리킨 것이다.

편집총국제 제도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지부가 “임면동의 제도를 남용해 편집총국장 등 제작국장들을 노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로 전락시켰다”며 노조의 부결권 행사로 “편집총국장 등이 무기력한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기자직 사원들의 투표를 거친 편집총국장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막말’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그해 7월 기각됐다. 단협 조항의 효력 여부를 다투지 않은 채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 인사의 효력 유무만 따진 채로 내려진 결론이었으나, 경영진은 지금까지도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은 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놓고 “과거의 임면동의제가 회사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

경영진은 기세를 몰아 편집총국장제 조항을 없애고 터무니없는 수준의 임명 ‘협의제’를 만들어냈다. 2016년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단협이 체결되기까지 회사에 조성된 ‘공포 분위기’를 보면 이 노사 ‘합의’에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했는지 알 수 있다. 경영진은 김태식 조합원을 상식 이하의 사유를 들어 해고했고, 연합뉴스지부가 언론노조 본부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을 놓고 김성진 당시 지부장을 징계했다. 사원간 명백한 임금차별인 신연봉제를 도입했으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규 규정에 신설했다. 단협에서는 감액형 임금피크제 시행, 전사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 4급 이하까지 전 호봉사원 연봉제 도입 등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요구를 잇따라 쏟아내 노조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기록으로 본 박노황 사장 '노조파괴 아무말 대잔치' "암적인 요소 반드시 제거한다...소송 낸 사람들은 다 자르고"

박노황 사장이 취임 이후 보여온 언행은 그의 목표가 '노조 파괴', 그 수단이 '편집총국장제 폐지'가 아니었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박 사장은 취임 전부터 대외적으로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진술한 대화는 없었고 그가 말하는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일방적 전달’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사장 내정 직후부터 편집총국장제 폐지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내정 다음 날인 2015년 3월 11일 노조와 만나 조복래 편집총국장 후보 임면동의의 부결을 사례로 들면서 “(사장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가 또 내놓으면 노조가 부결시킬 게 아니냐”고 했다. 이어 편집총국장제에 대해 “박정찬 사장이 자기 잘못을 마치 편집상무제가 있어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도시키기 위해서 꺼낸 것”이라며 “노조가 일부 대의원들, 과격대의원들 그런다고 휩쓸러가지고. 자기 좃대가 있어야지”라고 노조를 비난했다.

결국 총국장제를 무력화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영진에 노조가 가처분으로 맞서자 노조 지도부에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다. 간부들 사이에서 당시 임기를 마치기 직전이던 오정

훈 지부장이 “이러다 잘릴 수 있다”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2015년 4월 27일 하루에만 실국장급 간부 5~6명이 해고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언급했다.

시간이 흐른 이후 박 사장은 가처분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까지 생각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스스로 했다. 박 사장은 2016년 1월 7일 편집권 독립제도 관련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재판을 이기고 그랬을 때 나는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고 끝까지 가서 법적 대결해서 완전히 끝장내자는 생각도 있었어. 제기한 친구들은 다 자르고 회사 업무방해 혐의로. 난 사실 굉장히 강경했어 초반에”라고 말했다.

2015년 5월 2일 간부워크숍에서의 박 사장 발언은 반노조 감정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는 ‘노조의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간부들을 “노조가 ‘언노련’이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우며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선언했다.

경영진은 이어 2012년 파업 지도부의 지방전보 카드를 던졌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노조는 가처분을 철회했다. 조복래 상무는 조합이 2015년 5월 8일 “노조가 소를 취하했는데 회사가 3명을 지방발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내가 망가질게”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전보 전엔 ‘파업 반성문’ 요구...발령후엔 ‘지방사령관’?

노조가 2015년 박노항 경영진 취임 직후 회사를 상대로 단협이행 가처분 신청을 했을 당시 여러 경로로 노조와 조합원을 압박하던 경영진은 103일 파업을 이끌었던 전 노조 지도부에 ‘반성문’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2012년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한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지도부는 그해 8월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경영진은 ‘외부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도부는 물론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 간부들, 사내게시판에 양심껏 발언한 선배급까지 무더기 징계했고, 분노와 좌절감 가득한 직원들의 성명과 호소문이 쏟아져나왔으나 재심 끝에 징계를 강행했다.

당시 정직 6개월, 3개월, 2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던 공병설 전 지부장과 권혁창·경수현 조합원의 이름이 2015년 봄 뜬금없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파업 지도부의 지방 전보 움직임에 노조가 반발하자 파업과 관련해 ‘반성’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조복래 상무는 당시 이 사태를 풀고자 노력했던 노조와의 통화에서 “사장은 조금이라도 반성 자세를 보여야 온정을 베풀든(한다는 것)”, “그 세 사람이 그때 행위에 대해 나도 날리고 여럿 날렸잖아. 그런 데 대해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야”라고 하는 등 ‘반성’을 강요했다. 회사를 바로세우자는 열망, 뜻을 채 이루지 못

했다는 좌절감, 그럼에도 언론노동자로서 양심을 위해 행동했다는 자부심,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분노를 절대 잊을 수 없는 조합원들이 다시 뭉칠 힘을 애초에 꺾어놓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들 조합원은 지방에 가도 상관없으니 가처분 철회하지 말라는 의견을 노조에 전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개개인의 불이익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전향적으로 가처분을 철회했다. 그러나 노조의 지방전보 논의는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노조에 조 상무는 “내가 망가질게”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면서 “지방 내려갈 테니 끝까지(가처분) 철회하지 말라 했다면서 본인이 가겠다고 떠드는데 왜 막아주겠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5월 15일 공 전 지부장은 충북 제천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인 이주영 편집국 IT의료과학부 부장대우도 갑자기 대전충남취재본부로 발령받았다. 현 연합뉴스노조 지부장인 이 부장은 해고된 김태식 조합원의 뒤를 이어 2010년 공정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적이 있다.

이런 전보 조치는 금요일인 5월 15일 저녁 7시 34분에 발령됐다. 시행일자도 월요일인 5월 18일이었다. 단순한 부서 재배치도 아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터전을 옮기는 인사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말 이틀만 끼고 단행한 것이다.

공 전 지부장은 충북 제천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그가 2년간 제천에서 머문 방 평수는 교도소 독방보다 작은 3평 수준이었다. 회사는 통상 20평으로 규정돼 있던 지방발령자의 방 평수를 15평, 12평으로 줄이더니 급기야 실측 세 평짜리 방을 계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인사 조치에 직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기수별 성명과 호소문이 ‘사내게시판’에 올라 부당인사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글들을 ‘사내게시판’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거나 의견을 내는 데 쓰는 게시판인 ‘사원광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듯한 모습만 보였다.

지방발령 전에는 공공연하게 노조활동과 연관지어 말하던 경영진은 발령 후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정상적인 서울-지방 인사교류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부당한 전보를 ‘지방사령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용어로도 포장했다. 올해 3월 새로 취임한 노조 집행부가 경영진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 전 지부장 지방 전보가 부당하므로 철회하라고 요구했을 때 박 사장의 반응은 변함없이 황당했다. “지금 제천을 비하하는 겁니까? 지방을 비하하는 거예요?”라는 박 사장의 발언이야말로 지역취재본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두고두고 조합원들의 실소를 샀다.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2년반째 ‘공식’

사측, 직대체제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에도 강압적 태도

2015년 개정된 단협상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들은 기존 편집총국장제와 비교해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사장이 제작국장(편집국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는 7일 전에 내정자를 알리고 투개표관리위원회가 기자직 직원들에게 찬반을 묻는다.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3분의2 이상 반대시 사장은 투표결과를 반영한다. 언뜻 보면, 3분의2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본 편집총국장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과반 투표에 미달하거나 반대 투표수가 유효투표수의 3분의2 미만이면 신임으로 간주한다.” 투표수를 채우지 못해 유효하지 못한 투표 결과가 나오면 ‘통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허술한 제도조차 경영진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자신들이 내세운 ‘편집국장 직무대행’에게서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도 않고서, 마치 노조 방해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터무니없이 선전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주장대로 회사 업무포털에서 투표를 진행하면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만큼 중립

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야말로 중립적인 기구이자 수많은 기관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위탁안에 대한 당시 이흥기 전무의 답변도, 지난 5월 노사협약회에서 박 사장이 직접 밝힌 거부 이유도 ‘창피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사측에서는 회사 업무포털에서 투표를 하되 보안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노조는 2016년 11월 회사의 이런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투개표관리위원회 세부 운영기준을 협의해 연내 시행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곧바로 사측은 약속한 투표 보안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로 단협의 ‘명예훼손’ 등 다른 규정을 걸고 넘어졌다. ‘회사와 조합은 검증 및 투표 과정에서 내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단협 제15조 4항의 세부 운영 규칙을 두고, 사측의 주장은 ‘내정자 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해야 한다거나 ‘사생활 문제 등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기준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디에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기준을 포함시키자는 요구

도 접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투개표관리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재발하는 경우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신임 의사로 간주한다’는 편향된 규칙을 내세우고서, 이를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임 의사로 간주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신임 의사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중립적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합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16년 연내 투표를 주장해왔던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태도에 투표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포털 투표안 수용 방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기존의 노조안대로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투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선관위 투표라는 핵심안을 한동안 철회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인 편집국 체제를 정상화할 기회를 오랫동안 열어줬다가 사측의 비협조와 독선으로 무산된 상황임에도, 박 사장은 2017년 5월 노사협약회에서 적반하장으로 “노조가 선관위 투표라는 억지를 부려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늘어놓았다.